

※칼럼 내용은 본 신문의 論調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데스크

송세준 산업팀장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는 일자리, 소득주도,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4대 축으로 설계됐다. 가계의 소득을 늘려 소비가 늘면 투자와 생산, 일자리가 함께 늘어나는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복원하는 소득주도 성장이다. 해방 이후 우리 사회가 걸어온 길을 돌아해보면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한 것은 정책 패러다임의 혁명적 변화로 볼 만하다. 소득은 '성장의 열매'라고 보는 기존의 프레임은 완전히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벌 대기업과 수출 중심 경제구조를 급과속조처럼 여겼다. 정부는 해외에서 차관을 들여왔고 대기업은 독과점 지위 속에 거대 자본을 축적했다. 국민이젠 그저 '잘살아보세'를 외치며 욕망을 자극하는 길로 총분했다. 수출은 애국이었다고 양당배와 외제차는 죄악시됐다. 당연히 평범한 사람들의 소득을 높여 경제성장을 추진했던 적은 없다. 산업화 시대에 굳건해진, 수출과 대기업이 주도한 낙수(落水)효과를 진리처럼 여겼다. 반면 소득주도 성장은 '소비 증가→생산 확대→투자 증가→일자리 확대→소득 증가'의 선순환, 즉 내수와 가계가 성장을 주도하는 분수(噴水)효과를 기대한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겨우 1년이 지났다.

○...최근 불거진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이런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결과와 관련, 문 대통령이 "소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하자,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월급 받는 근로자의 소득은 늘었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실업자 등 근로자의 가구의 소득은 감소했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비판이 나올 여지가 많다.

자영업자나 실직자는 빼고 일반 근로자 가구 통계를 근거로 효과를 논하는 건 다소 부적절 하다.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이 실리는 근거이기도 하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전부인양 확대 해석하는 것도 곤란하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다. 가장 낮은 위치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만을 치는 것이다. 여러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특히 더 이상 수출이 성장 엔진으로 작동하지 않고 대기업의 막대한 이익이 투자와 고용증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래서 소득에 비해 복지 수준이 열악한 현대 대한민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낙수효과'는 이제 기댈 대상이 못된다. 경제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격차의 확대,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뿐이고 앞으로 그걸 것이다. 우리는 이를 너무 잘 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은 새로운 실현인 동시에 선택지가 없는 단 하나의 길로 보인다.

왜냐면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재벌 중심의 개발 모델과 동의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시장에 맡기자는 얘기는 언뜻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이미 출발선이 다른 상황에서 대단히 공정하지 못하다.

더구나 재벌이 국민경제의 중심일 때, 재벌이 위기에 처하면 정부는 내키지 않아도 살려줘야 한다. IMF 시절처럼 국민경제를 위해 어쩔 수 없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에 매우 익숙한 재벌 대기업이 스스로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재벌 중심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정부와 국민은 언제든 그들의 불모가 될 수 있고 보험 역할을 해야 할지 모른다.

물론 아무리 방향이 옳아도 방법이 정교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방향 자체를 바꿀 필요는 없다. 이제 막 걸음은 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다.

금요일 아침



반극동  
코레일테크 대표이사

요즘 지방대학은 입학생 확보와 졸업생 취업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각 대학은 산학협력단 운영과 산업체와의 연계프로그램에 힘쓰는 중이다. 우리회사도 몇몇 대학과 산학협력 MOU를 체결하고 있다. 그 중 대구에 있는 모 대학에서 지난달 특강 요청을 받았다.

학교 측에서는 회사 소개정도만 부탁했지만 강사로서는 학생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취업에 관한 내용으로 주제를 잡았다. 청년 취업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지 관련된 자료를 찾고 교안을 준비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다. 구직도 어렵지만 구인난 또한 그에 못지않게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는 것이다. 취업예정자 대부분이 우리나라 기업의 1% 미만인(중사자수 10%) 대기업에 만 입사하려고 한다. 그로인해 99%의 중소기업(중임원수 88%)들은 구인난에 시달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원인이었지만 중소기업에 기피하는 사회적 인식의 차가 더 컸다. 통계를 보면 2016년도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공공부문 정규직화 마중물 될 코레일의 청소경비업무

월급은 285만원 수준이다. 그 중 절반은 200만원 이하의 봉급을 받는다.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더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 올라가지 못할 나무에 매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대졸자의 절반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우리나라의 왜곡된 임금구조에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이익은 결국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저임금에 따른 반사 이익에서 온다는 불편한 진실도 의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코레일의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코레일테크는 올해 초 개통한 강릉선의 대관령 터널 방제설비를 일시적으로 맡았다. 코레일의 정규직화 대상 업무를 한시적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이라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다. 월 200여만 원의 보수를 받는 자리지만 기간제(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5번의 모집에도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구인난의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 최저임금을 받는 철도건설목경비업무 종사자와 전기통신시설 유지보수종사자는 작년 7월 이전에는 연간 이직률이 20%를 넘었으나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이 발표된 이후에는 이직률이 약 1%에 그쳐 고용이 급격히 안정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비정규직 운영으로 인한 고용 불안이 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코레일테크는 7월 1일과 8월 1일자

로 각각 코레일의 사육관리 인력 287명과 철도역 청소업무 담당자 192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코레일은 그동안 22개 민간회사에 위탁용으로 수행(비정규직)하던 것을 자회사인 코레일테크에 일괄 위탁했다. 기존에는 코레일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회사에 3년 주기로 용역을 계약했다. 같은 일을 계속하면서도 입찰 제계약시마다 회사가 달라져 고용이 불안했다.

뿐만 아니라 퇴직금 누적이 어려웠고, 회사는 이윤을 남겨야 하기에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에 소홀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자회사인 코레일테크에 장기적으로 위탁함에 따라 일정부분 호봉실적도 반영하고 후생 복지 또한 기존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코레일이 이제나마 단순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까지 고용을 안정시키고 어느 정도 임금을 보전해 준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이제 우리사회도 최저임금수준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돌아볼 때가 됐다. 최근 중소기업이 문을 닫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반면 대기업은 큰 영업이익으로 확장일로에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고용을 안정화시키고 보수와 복지수준을 조금이라도 끌어 올려 소득 불균형을 해소한다. 결국 전체 국민의 평균소득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이번 코레일의 청소 환경경비업무의 자회사 위탁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시도하는 정규직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기자의 눈



윤재현 기자  
mahler@

미국 부시 대통령이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에 미국자본이 이렇게 많이 진출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 취임 초기 대북 강경책은 차츰 완화돼 임기 말인 2008년 북한은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된다.

한국인 입장에서선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주한 미군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우방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맥도날드(미국 자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자본 뿐만이 아니라 인적 교류도 평화를 가져온다. 전쟁 시작 전에는 자국의 대사관을 철수시킨다. 적국에 우리 편이 있다면 공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은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미국인을 인질로 억류시킨다. 북한에는 미국 자본도 없지만 미국이 좋아하는 석유도 없었으며 엄청난 액수의 미국 자본이 진출한 한국이 바로 밑에 있다. 그래서 1953년 정

전 이후 여러 차례 위기는 있었지만 미국의 공격을 받은 적은 없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였다. 이를 두고 1953년(한국전쟁 종전) 체제라는 견해가 대다수이지만 진회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1952년(폐전) 국일본의 전쟁배상 감면과 동아시아에서 미국

북미정상회담과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종결

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야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체제라고 부른다.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소련 몰락 이후 북한의 핵 때문에 억지로 유지됐던 비정상적인 1952년 체제가 종결되고 정상적인 국제질서

가 들어서게 된다는 설명이다. 지난 12일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만났다. 이것은 북한의 핵과 미국의 패권주의에 의해 억지로 유지됐던 1952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종결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미국 주류 정치권에서 기반이 없었던 TV 리얼리티쇼 진행자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었던기 때문이

다. 그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66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유지됐던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종결시키고 세계질서 정상화를 향한 인생의 마지막 리얼리티 쇼를 시작하려 한다.

전기신문 electimes.com 1964년 5월 18일 창간 (주3회) 등록 서울, 750118

사장·발행인 이형주	편집인 이홍우	편집국장 유희덕	인쇄지 문화일보
주소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87길 8 (동촌동) (우)07664	대표전화 (02)2168-1300		
사장실 (02) 2168-1301-2	광고마케팅팀 (02) 2168-1351-7	광고문의 (02) 2168-1351-7	
부사장실 (02) 2168-1303-4	FAX 2168-1349	FAX 2168-1349	
편집팀 (02) 2168-1312-5	경영지원팀 (02) 2168-1306-8	구독문의 (02) 2168-1306-8	
에너지 Biz팀 (02) 2168-1320-4	FAX 2168-1349	FAX 2168-1349	
산업팀 (02) 2168-1330-4	사업팀 (02) 2168-1360-1		
디지털뉴스팀 (02) 2168-1340-2	FAX 2168-1349		
FAX 2168-1349			
매주 월·수·금요일 발행 구독료 월 15,000원 연 180,0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MOF, CT, PT 전문생산 56년 / 정부조달 우수제품 선정

당사의 제품은 국내 최초로 MOF 내부의 PT부 철심의 구조를 개선하여(삼각철심 → 단독철심) MOF 전원축(외부)의 결상 사고시에도 MOF가 소손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유입형 MOF(3각철심구조)는 개폐기 오작동 또는 파워퓨즈 단선 등 MOF 전단에서 결상사고 발생시 MOF는 반드시 소손이 됩니다. (결상사고 발생시 과부하 발생) - 2011년도 11월 대한전기학회 논문 (추계학술대회 / 발표자 : 한전 전력연구원/송배전연구소)

22.9kV 유입형 MOF	개선전 (3각 철심 사용)	개선후 (단독 철심 사용)	22.9kV 몰드형 MOF
		별도 주문 제품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가공인기관 신뢰성인증시험을 통한 제품입니다.



영화산업전기주식회사

본사·공장·연구소 : (421-806)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123-1  
TEL.(032)671-7184(대) FAX.(032)676-0344  
서울사무소(영업부) : (140-846)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가 27-20  
TEL.713-6957(대), 717-0900 FAX.717-0300, 0306  
Homepage : www.yhe.kr  
견적 및 기술문의(E-Mail) : mofcpt@chol.com